

# 학교 구성원 학교운영 참여 보장

###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도의회 본회의 의결

#### 김승환 교육감 핵심 공약 ‘학교자치 활성화’ 탄력 학교장,학생회 등 자치기구 두고 자치권 훼손 안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3기 핵심 공약중 하나인 ‘학교자치 활성화’

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학교자치 조례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학교로 권한을 배분하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장 13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학교자치 조례의 핵심은 학교교육의 주체들

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두고, 학교의 장은 각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각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도 법제화 했다.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고,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해 개최토록 했으며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

교육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자치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2019 한국불교지도자 신년 하례법회를 마친 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참석 내빈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이병철 도의원 “의료현장 폭력 예방책 마련해야”

### 5분 발언에서 “경찰과 협력 촉진 경찰서와 핫라인 도입을”

전라북도 의료현장 폭행·협박행위가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총 124건이 발생한 반면 이 중 처벌건수는 5건(징역 2건, 벌금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18일 열린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이병철 의원(전주5)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병철의원은 해외사례를 들어 의료현장 폭력을 억제·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퇴직경찰관 병영경비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여 경찰과 협력을 촉진하고 인건 파출소 및 경찰서와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예방 및 안전

한 의료현장 구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폭행·협박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낮아 단서조항의 폐지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



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인력 확충, 폭력행위처벌 강화와 함께 현행 법의 경우 경비원에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뉴욕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뉴욕보건병원협회 산하 의료기관에 평화유지관을 두고, 병원내 폭력행위자를 영장없이 체포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

여하고 있다.

일본은 피해예방을 위해 경비원배치 병영직위와의 협력추진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퇴직경찰을 섭외하여 병원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하고 핫라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현황’을 인용하면서 “전국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5,023건에 달했으며 이중 전라북도는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총124건이 발생하였으나 처벌 건수는 124건 중 5건(징역 2건, 벌금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홍성임 도의원 “호남권 관할 특별 행정기관 불평등... 전북 뭍 찾아야”

### 49곳 중 45곳 광주·전남에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지난 18일, 제359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은 전남 광주와 생활권 및 경제권이 얽혀나서 독자권역인데도 호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 특별행정기관이 불평등하게 분포돼있다고 지적하고 전라북도가 전북 뭍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호남권 공공 특별행정기관 49개 중 45개가 전남 광주권에 위치해 있는 반면, 전북에는 4곳뿐이고 전남 광주권에 위치한 45개 기관 중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가 없는 기관도 20곳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광주에는 고등법원, 국제청, 노동청, 통계청 등이 위치한 반면 전북에는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지역별 공공 특별행정기관의 무게감에서도 큰 차



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각 지역의 인구비례로 비교해 볼 때 최소한 17개 이상의 기관이 전북에 위치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45대 4라는 불공정한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일지리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 따른 도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문제인 정부부처 지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이며 전라북도가 전북권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조례 제정 토론회

### 송지용 부의장, “환경오염 방지 기여 위해”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원주 제1선거구)은 지난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원주군 농민회 회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송지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을 1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제5조에 “영농폐기물 발생량,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

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송지용 의원은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업무지원과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뤄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靑, ‘손해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당에서 판단할 문제”

청와대는 지난 18일 ‘목포 건물 투기’ 논란의 중심인 손해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반 ‘손해원 논란’에 대한 내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연일 말을 아끼며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IMSIL-GUN  
임실군

##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7    홈페이지 www.imsilin.kr